SPECIAL-1
논단 & 특집

FTA 시대에 대비한 전기산업의 대응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인교

1. FTA의 경제효과

금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지역주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FTA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체결된다. FTA 회원국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회원국에게는 기존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활동이 증가하며,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FTA 체결의 또 다른 이익은 무엇인가 · 규모의 경제 실현, 소비자 후생 증진,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제도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FTA로 수출시장이 확대함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상품 1개당 평균생산비가 낮아지게 된다. 이를 규모의 경제라 한다. FTA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FTA 회원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FTA는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사업환경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도입하게 된다. 외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활용하기 위해 FTA 국가로 투자를 늘리게 된다. 외국인투자는 현지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을 이전시키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FTA를 통해 기업의 담합행위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절차의 개선 등 각종 경제제도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FTA 회원국들은 대체로 선진적인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FTA가 만능인 것은 아니다. FTA가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FTA 추진에 따른 비용도 들기 때문이다. 관세철폐로 수입품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에 견딜 수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농업계는 정부의 FTA 추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전반에 이익이 되는 FTA를 추진하더라도 정부는 무역자유화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분야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주고 있다.

2.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평가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되고 한 달이 지나자, FTA가 칠레와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의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칠레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FTA의 영향 분석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칠레와의 FTA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4월1일부터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가 낮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4월 이후로 조정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리 등 대칠레 수입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시세가 금년들어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FTA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한국과 칠레 양국 정부가 FTA 협정을 타결 · 발효시킴으로써 한-칠레 FTA의 활용 여부는 협상당국의 손에서 경제 및 통상협력의 주체들에게로 넘어갔다.
즉, 어렵사리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증대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관계 긴밀화의 계기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남미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정부내 부서와 민간 기업인들에게 달려있다. 정부는 칠레와의 협정을 발판으로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칠레와의 협정을 활용해서 대칠레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 일본과의 FTA 협상과 함께, 아세안, 인도, 캐나다, EFTA(스위스 등 유럽 4개국)와의 FTA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멕시코, 인도, 캐나다, 유럽권국가(EFTA)와의 FTA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FTA 추진로드맵 '을 확정하였으나, 최근 이를 확대보완하였다. 칠레와 체결한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지연되는 당시의 여건에서 중장기 FTA 추진일정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대외개방 및 개혁을 통상정책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첫 FTA를 비준 · 발효시키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외개방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로드맵 확정이후 대내외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의 합의도출 실패이후 주요 교역국들이 FTA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의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구주 및 미주지역에서 지역블록간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칠레와의 FTA 발효로 우리의 FTA 추진역량이 제고되었고, F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FTA의 국제적 추세에 뒤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복수의 FTA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업계가 FTA 추진을 요청해왔던 국가들과의 FTA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불리한 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아왔다. 멕시코가 이미 3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업계는 현지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으로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미국과의 FTA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FTA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니, 멕시코와의 FTA를 계기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가입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 제1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최근 표명하였다. 두달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문화관광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 표명으로 지난 6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 · 미 투자협정(BIT) 재협상 및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에 미국과의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 · 미 FTA는 미국의 입장 선회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말 방한했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쉰너(Shiner) 부대표와 그 일행이 제시했던 한 · 미 FTA에 대한 발언은 당분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간

주되었던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 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FT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이익은 미국과의 FTA가 가장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개최되는 한 · 미 재계회의에서 양국간 FTA 이슈는 단골메뉴이고, 다수 연구결과가 양국간 FTA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 · 미 FTA에 대해서는 양국간 시각차가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감한 농업개방과 양국간 투자협정 타결지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FTA 추진 의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FTA하에서 농업개방 의지가 약하고, 칠레와의 FTA 협상 및 국회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등이 금융위기 이후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및 비경제적 이익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스라엘(1985), NAFTA(1992), 요르단(2002), 싱가포르(2003), 칠레(2003),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2004), 바레인(2004), 호주(2004)와 FTA를 체결했으며, 조만간에 모로코, 태국 등과의 FTA 협상도 개시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FTA 정책의 특징의 하나는 도하개발의제(DDA)이 부진한 지난 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와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NAFTA와 미-호주 FTA를 제외하고는 FTA 추진 목적이 정치안보 등 전략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내 FTA 추진체계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미국의 FTA 대상국 선정 자체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주관으로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FTA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개방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전략적 중요성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한 · 미 FTA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농업개방과 연계시키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0년 12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USITC에게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요청하면서 농업분야 개방 효과에 대해 정밀 검토("special attention to agricultural goods")를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FTA의 유용성을 인식해야 하며, FTA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인적 교류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이해 강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경제중심 및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계기를 확보하고, 이후 한 · 중 · 일 FTA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하에서 농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 · 호주 FTA에서 보듯이, 농업을 포함한 전부문 자유화를 강조하는 미국도 경우에 따라 민감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치안보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을 균형되게 평가하면, 한 · 미 FTA는 추진 필요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 · 미 FTA에 대한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상당 수준의 내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 · 미 재계회의에서 양국 재계는 양국간 FTA 추진을 요청하고 있어, 양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양국간 FTA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FTA 추진로드맵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와의 FTA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1,362억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938억 달러를 기록하여 6년 동안 43%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을 꾸준히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우리의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중국으로, 1997년 136억 달러에서 2003년 35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다만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2003년에야 겨우 1997년 실적을 회복한 상태이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직 금융위기의 휴유증이 남아 있는데다가, 이 지역이 많이 수출하는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고, 정치적 불안이 겹쳤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인접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수지흑자 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중국, 일본 등 경쟁국가들의 진출이 활발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을 상실해 나가 있다.

최근들어 아세안 지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이면서, AFTA를 역외국가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일본과의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도,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진행되고 있고, 오세아니아 국가와 FTA 논의를 최근 재개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허브로 발전하려는 아세안은 200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FTA 검토를 공식제안하였으나, 당시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국무총리가 농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한때 양 지역간 관계가 냉랭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비젼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을 제안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 사회에 대해 개방과 개혁 의지를 표방해 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내 언론이 총리의 발언내용에 대해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자,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에서의 발언을 뒤엎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세안 학자들은 적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행히 2003년 양 지역간 통상채널을 통해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FTA를 검토하는 산관학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금년초부터 양 지역의 통상정책 담당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한-아세안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일차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아세안 수출시장 접근확대가 예상되고,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거점 재배치를 가속화시키고, 이를 통해 최적의 원부자재 조달, 물류비용 축소, 생산단가 하락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인도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만 제외되었을 경우를 고려하면 FTA 체결의 이익은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창해온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통합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중 다수는 농산물 수출국이고, 우리 농업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양 지역간 FTA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농업개방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간에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현재 추진하는 FTA 일정을 고려하면, 서둘지 않으면 아세안의 빡빡한 FTA 협상일정에 우리나라를 끼워넣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금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양 지역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도와의 FTA 검토도 의의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10억이 넘는 인구, 세계 4위의 구매력기준 GDP 규모를 가진 인도는 신흥거대국가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중국, 아세안, 브라질 등이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인도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조만간에 제2의 중국이 된다는 것이다. 인도는 평균 30%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수입수요 확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는 주로 대중국 수출 증가로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나친 중국의존에 따른 리스크가 문제되고 있다. 지난주 윈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시사 발언으로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와의 FTA 추진은 대중국 의존 심화를 줄이면서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낮았던 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전기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품목에 따라 수입품과 격심한 경쟁상태에 놓인 품목도 있을 수 있으나, 산업 전반으로 보면 FTA 체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칠레와의 FTA가 우리 제조업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실제 협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전기동 한개 품목만을 즉시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 제조업종을 협정 발효즉시 자유화시키기로 하였다. 칠레는 구리 매장량이 가장 많으면서 가장 싼 값에 생산하는 국가이다. 협상초기 칠레는 주력 수출품인 전기동에 대한 관세를 협정즉시 철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로 7년철폐로 최종 결정되었다. 전기동은 전자제품의 기초소재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세철폐는 다른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칠레와의 협상결과에 대해 우리 제조업계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먼저 싱가포르와의 FTA의 경우, FTA 추진동기가 무역증진보다는 선진화된 경제체제의 전수, 아세안과의 FTA 체결 환경 조성, FTA 추진 경험축적 등 전략적 목적이 중요하고, 싱가포르가 맥주 등 알콜성 음료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계가 사실상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만이 싱가포르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의 국제경쟁력이 강한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들은 장기의 자유화 이행기간이 부여되거나,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는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싱가포르가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자유항으로 인해 비싱가프로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우회 수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총수출의 약 절반이 재수출(re-export)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FTA에서는 시장개방과 더불어 상품의 원산지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더구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얼마전 모 경제신문이 이러한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록 수출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더라도, 우리 경쟁업체가 FTA하에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통관당국에게 이를 조사해 주도록 사후에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자율작성 업체로 하여금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다수 산업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일본과의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평균 3배 정도 높은 편이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 기계류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GATT 제24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를 자유화대상에서 완전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FTA 추진에 따른 전기산업의 대응

FTA 추진을 대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칠레와의 FTA 추진 과정에 나타난 우리 기업의 자세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은 칠레와의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FTA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칠레 수출기업들은 정부의 FTA 추진에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로 기업부도와 도산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FTA로 인한 중장기 이익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는 점과, 우리 정부가 일찌감치 제조업 전 부문 개방(전기동만 7년 관세철폐) 방침을 정했다는 점도 작용했으나, 우리 기업들은 FTA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FTA에서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기준 설정에 있어 업계의 의견 제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기준 설정을 담당한 정부관계자

는 업계의 소극적인 자세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필자는 정부의 요청으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할 시장양허안 연구를 실시하면서, 정부내 담당 부서를 통해 협회와 업체에 대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질문지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다행히 칠레와의 FTA가 협상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 업계는 FTA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국회비준과정에서 일부 기업인과 경제단체에서 FTA 비준의 불가피성과 FTA에 대한 정치권의 발상전환을 촉구함으로써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시대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개방과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에 우리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3년 하반기 우리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동 로드맵은 싱가포르, 일본과의 FTA를 단기적인 추진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세안, 멕시코 등과의 FTA도 조만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와의 양자간 FTA, 한 · 중 · 일 FTA, 동아시아 FTA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환경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개방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 큰 기회를 가질 것이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력있는 부문 위주로 기업구조를 재편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격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무역자유화, 구조조정 등으로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조와의 사전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에 대해 업계는 입장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FTA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입장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요약된다. 즉,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FTA하의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FTA에서 동종 산업의 개방 사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단계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 협상 당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기준, 투자제한조치 해제, 반덤핑,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규범, 기술협력, 통관절차 개선 등에 대해 산업 차원의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FTA 대상국 선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FTA 추진로드맵을 확정하였으나, 다수 산업들이 다른 형태의 FTA 추진을 요청할 경우 그 로드맵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자체 연구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산업내에서도 개별 기업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면서, 대정부 정책을 건의하는 것은 산업별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협회도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FTA 정책에 대한 기업과 산업의 의견이 많이 제시될수록 우리나라는 더 의미있는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FTA 추진일정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특히 투자전략 수립시 그러하다. FTA하의 투자규범은 기존 투자제한조치를 자유화하거나, 투자보호규정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FTA 추진이전에 해당국가 유망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통합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기업의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모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1社1村 운동은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를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농촌캠페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재단을 만들고 농촌출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진취적 사고로 FTA 추진을 사업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실력이 뒤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 · 일 FTA에서 전기산업은 자동차, 기계류 등과 더불어 가장 민감한 업종이 될 것이다. 현재 5~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기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일정수준 관세보호를 받던 산업이다. 지극히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 업계는 자유화예외 혹은 장기간의 관세철폐 유예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협상 상대국인 일본은 공산품 전품목 무세화를 주장하면서, 기계, 전기분야에 즉시 또는 5년내 단기철폐로 요구할 가능성 높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일측의 요청을 설득 ·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우리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업계는 정부와 더불어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장개방 협상과 더불어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기업보다는 일본의 기업들이 동남아와 중국 등 해외 생산시설을 더 많이 구축하고, 원자재의 글로벌아웃소싱 비율이 훨씬 높으므로 역내 부가가치 최소비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강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부품조달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현재 여건, 향후 국내외 투자계획, 기술발전의 추이, 원부자재조달의 발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산업이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경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FTA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설치할 수 있으나, 너무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해당 산업의 생산단가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원산지규정을 가급적 다른 FTA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